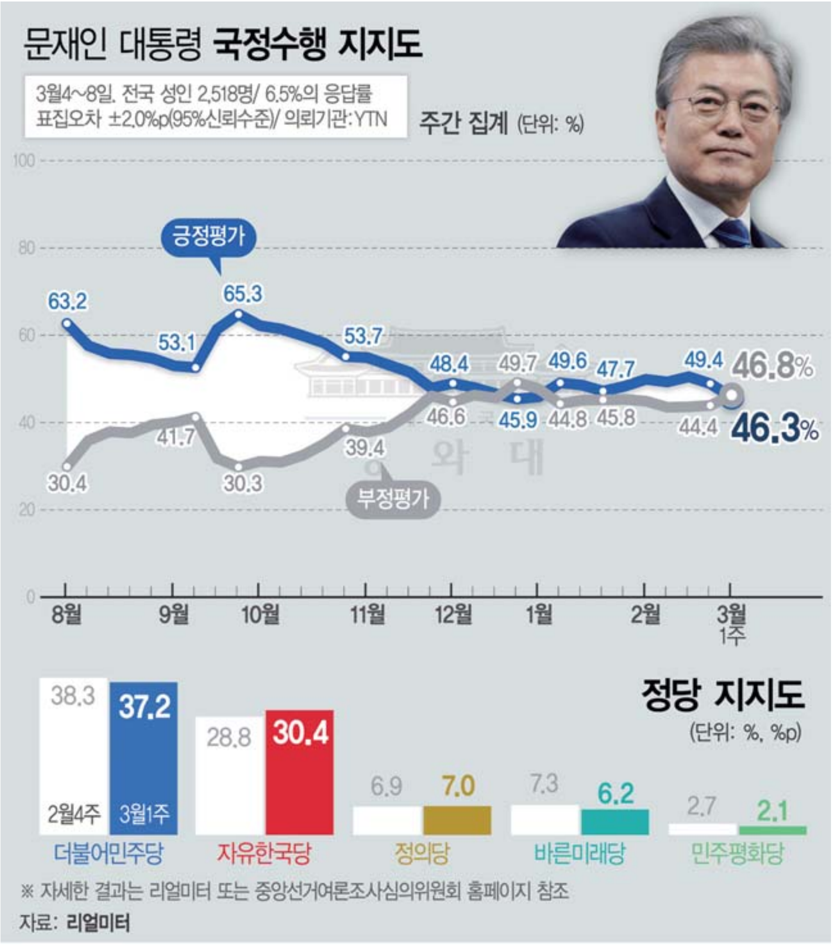
文 대통령 지지율 다시 '데드 크로스'

전주比 3.1%p 하락한 46.3%…북미 회담 결렬·미세먼지 영향

민주당도 2주 연속 하락 37.2%…한국당은 상승해 30.4% 기록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9주 만에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는 북미 관계를 비롯해 미흡한 미세먼지 대책 여파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4~8일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8명을 상대로 조사해 11일 공개한 3월 1주차 주간집계(95% 신뢰 수준·표본오차 ±2%p·응답률 6.7%)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6.3%가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부정평가는 지난주 대비 2.4%p 오른 46.8%(매우 잘못 30.3%·잘못하는 편 16.5%)로 나타났다. 모름·무응답은 6.9%로 집계됐다. 긍정·부정평가 간 격차는 오차범위(±2.0%p) 내인 0.5%p로 집계됐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직전 조사인 2월3주차 주간집계(51%)에서 50%대를 회복했지만, 2주 연속하락하며 40%대 중반까지 떨어졌다. 2주 사이에 총 4.7%p가 빠졌다.

오차범위 내에서의 근소한 차이긴 하나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것은 1월1주차 주간집계(긍정 46.4%·부정 48.2%) 이후 9주만이다. 당시 '신재민 논란'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선 바 있다. 이후 문 대통령이 경제행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줄곧 긍정평가가 앞서 왔다.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원인과 관련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장 복구 정황에 이은 북미관계 악화 가능성 보도가 이어지고, 미세먼지 등 민생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8.3%p↓·36.5%)에서 낙폭이 가장 컸다. 대전·세종·충청(4.7%p↓·45.2%), 경기·인천(4.5%p↓·47.7%), 서울(1.8%p↓·47.9%) 순으로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30대(8.5%p↓·54.8%)에서 지지율이 가장 많이 빠졌다. 50대(4.7%p↓·42.4%), 40대(2.6%p↓·60.1%), 20대(1.8%p↓·9.3%), 30대(1.1%p↓·8.8%)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정당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지지율과 같은 궤도를 그렸다. 2주 연속 하락한 37.2%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30.4%, 정의당 7.0%, 바른미래당 6.2%, 민주평화당 2.1% 순으로 민주당 뒤를 이었다.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1.1%p 하락한 반면, 한국당은 1.6%p 상승했다. 두 정당간 격차는 6.8%p로 좁혀졌다.

9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방송화면 캡처)

조국, 유튜브서 '공수처' 설치 강조
손학규 "비서 분수 모르고 오만방자"

유시민 팟캐스트 방송 '알릴레오' 출연…야당 반발
文정부 인사 잇단 출연에 "국정홍보장이냐" 비판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자 야당 측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수석은 대통령의 비서로서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좀 자제를 해 달라"고 입을 열었다.

손 대표는 "비서가 유튜브에 나와 국회에 공수처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국회의원을 놀리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할 일이냐"며 "비서는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다. 조용히 비밀리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측근 실세들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오만하고 방자하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최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정부 정책을 홍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어느 나라 비서가 이렇게 SNS로, 유튜브로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느냐"며 "알릴레오 티비도 청와대 비서까지 끌어들이면서 유튜브에서 정치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지 말아 달라"고 경고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조 수석은 제2의 우병우가 돼있단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조 수석은 더 이상 촛불혁명 주체가 아니라 촛불혁명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 수석은 지난 9일 공개된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공수처를 만들어서 야당을 탄압할 것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니 아주 황당한 주장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이 만들어지면 여야 모두 막론하고 수사할 것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에 청와대도 있다"라며 "많은 야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포함'이 옳다고 해서 정말 기쁜 일이다"라고도 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논의가 지지부진한 데 대해 "국회는 촛불혁명 이전에 구성됐다.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괴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설치는 청와대가 칼을 차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받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유시민의 알릴레오에는 조 수석 뿐만 아니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비서관,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담당 특별보좌관 등이 잇따라 출연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알릴레오가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우상호 "文대통령, 중진 3명 입각 부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유력시되다 입각이 불발된 것과 관련, 총선에서 역할을 해달라는 청와대와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개각 명단에서 제외된 결정적인 이유를 묻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기정 정무수석에게 '이번에는 정치권 인사를 너무 많이 데려가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중진 의원을 서울에서 세 명씩이나 빼는 게 바람직한 거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3·4선 의원을 쫙 빼버리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다"며 "저는 어차피 개각 이야기만 있으면 나오는 사람이다. 어차피 언제해도 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로 지명된 진영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모두 4선으로 각각 서울 용산과 구로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우 의원 역시 3선으로 서울 서대문갑 지역구다.

우 의원은 "이해찬 대표도 '내년 총선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한 명 정도 남겨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했다"면서 "제가 전략홍보본부장, 전략기획위원장 등 총선 때마다 전략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입각 이야기가 나올 때는) '비문 제거용'이라는 음모론이 나오다가 장관 지명이 안 되니까 또 다른 음모론이 나온다"면서 "제 문제에 관해서는 이런 음모론을 제기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광주 시민들 위대해 전두환, 역사 앞 사실 밝혀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법에 출석한 것에 대해 "진실을 진술해 역사 앞에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광주 시민은 위대하다. 5·18 당시에도 시민들은 자율적으로 질서를 지켜 사고하나 없는 위대한 광주를 만들었다. 세계는 유네스코 기록으로 광주 시민의 위대함에 대해 존경으로 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오늘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이 광주지법 법정에서 열린다. 광주 시민은 다시 한 번 5·18의 위대한 질서로 차분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 차원의 대응 마련도 촉구했다. 그는 "5·18 특별법, 제·개정으로 망언, 망발을 처벌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윤리위 징계 등도 빨리 심의 통과시켜야 한다"며 "한국당은 5·18 진상조사위원을 합당한 인사로 재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며 "각 자가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지역공감.미래창조.정론직필
湖南新聞
홈페이지 : www.i-honam.com
전화 062)224-5800
팩스 062)222-5548